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文興鎬

I. 서론	IV. 북중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과 한계
II.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A. 선택적 균형의 전략적 유용성
III.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전략과 대북정책	B. 선택적 균형전략의 한계
A. 시진핑의 한반도 인식	V. 결론
B.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과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의 균형	

한글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적 요인으로서 북중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진핑(Xi Jinping)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운용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대북정책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의 전략적 의미와 내용, 선택적 균형의 유용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전략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외전략의 공세적 조정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 집권 이후 한반도전략과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확대가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정상관계를 선택적으로 혼용하고자 하는 전략의 유용성과 한계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이 북중관계를 동맹과 정상,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시키고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은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외 전략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있어서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자의적으로 넘나드는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은 남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 대 한반도 영향력의 우위 유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압력 회피 등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대 북한 영향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3).

력 행사의 현실적 한계, 체제의 생존을 위한 북한의 대외적 탈출구 모색, 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일본·미국·러시아 등의 정책변화,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불신 등은 중국의 자기중심적 대북정책 추진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 역시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존속을 통한 자국의 전략적 자산 유지를 위해 북중관계의 급격한 퇴보를 원치 않는다는 점도 선택적 균형 전략의 분명한 한계다.

주제어 : 시진핑, 대북정책, 북중동맹, 정상관계, 선택적 균형

I. 서론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최고 국책으로 설정했다. 그 연장선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국가 주인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상실한 절대 다수 인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내적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3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축적한 경제적 역량을 대외적 영향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이러한 공세적 대외전략은 미국 중심의 유일 패권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며 그에 따른 중미간의 세력전이 현상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재조정 (rebalancing)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이미 크고 작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을 기껏해야 새로운 ‘수준’(level) 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중미관계의 새로운 ‘형’(model)의 정립을 의도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지역이다. 특히 최근 동북아시아는 북한 핵문제, 중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적 재무장 추진 등의 문제가 중미관계의 갈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이러한 갈등 양상은 중미관계의 질적 전환 과정에서 중일, 한일, 남북한의 기존 갈등구조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결국 한중, 북중, 한미, 북미, 북일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최대 변수는 역시 여타 양자관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한 요인이다.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요인인 북한 변수는 중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북중관계 변화는 결국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2013년 6월 베이징 정상회담, 2014년 7월 서울 정상회담, 2014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는 반면 북중관계는 2011년 12월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최고지도자간의 접촉이 단절되는 등 기존의 동맹관계가 퇴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핵으로서 북중관계 향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방향을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운용이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시진핑 지도부가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대북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의 전략적 의미와 내용, 선택적 균형의 유용성과 한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전략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외전략의 공세적 조정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시진핑 집권 이후 구체화된 한반도전략과 대북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확대가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정상관계를 선택적으로 혼용하고자 하는 전략의 유용성

과 한계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Ⅱ.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직후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배석한 기자회견 석상에서 향후 국가대전략의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대내적 혁신과 대외적 도약의 청사진이다.¹⁾ 특히 시 주석은 국가 부주석 시절인 2012년 1월 방미 과정에서 이미 ‘신형대국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으며 이는 평화, 발전, 공영을 전제로 한 대외전략의 공세적 재조정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제시된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는 기본적으로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국관계의 재조정과 주변국관계의 평화·안정적 유지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전략의 핵심 목표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중국의 꿈 실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²⁾ 우선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필요성을 들어 미국 중심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재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미관계를 ‘이익상관자’(stake holder), ‘동주공제’(同舟共濟) 등 상호의존, 호혜협력의 관계로 간주하는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중미관계의 대등성 제고 및 대 중국 견제에

1) 시 주석은 또한 취임 직후 2012년 11월 18일의 중앙정치국 제1차 ‘집단학습’(集體學習)에서 ‘현대화건설’, ‘조국통일’, ‘세계평화·공동번영’ 추진을 중국공산당의 3대 임무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2012. 11. 16; 『人民日報』, 2012. 11. 19.

2) 중국은 이러한 외교를 주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를 의미하는 ‘主場外交’라고 지칭하며 이는 시진핑 지도부의 외교전략 기조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 우젠민(吳建民)은 중국외교가 대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국외교, 주변국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의 4개 영역을 구분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외교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외교 대전략의 목표로 ① ‘굴기’ 과정의 난관 극복, ② 국제사회의 각종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③ 세계 평화·발전과 번영의 촉진을 제시한다. 吳建民, “中國外交需要大戰略,” 『國際關係研究』(2013年 第1期), 上海社會科學院 國際關係研究所, p. 12 참조.

집중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억제하려는 것이다.³⁾ 더 나아가 중국은 2013년 6월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의 방미, 2014년 4월 척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의 방중, 2014년 8월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관의 방미과정 등에서 중미의 ‘신형군사관계’(新型軍事關係)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미국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⁴⁾ 물론 신형대국관계, 신형군사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무시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대립일변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군사안보 분야와 같이 자국의 패권적 지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중국과의 기본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유지하고자 한다.⁵⁾

한편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신형대국관계 수립과 함께 주변국과의 평화

-
- 3)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2014년 3월 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기간 중에 있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은 강대국 간의 빈번한 충돌과 대항의 역사적 숙명을 극복하고 협력과 윈-윈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人民日報』, 2014. 3. 9. 참조.
- 4)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① 중국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나 주요 관심사를 저해하지 않았지만, ②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간여하며, ③ 따라서 새로운 중미관계 형성의 장애는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고, ④ 미국이 변해야만 새로운 관계형성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Helene Cooper, “Hagel Spars with Chinese over Islands and Security,” *The New York Times*, April 8, 2014; Suisheng Zhao, “Building the New model of US-China Relationship in East Asia,” *East Asia in reconstruction-Towards Mature Partnership*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n Studies’ sponsored by Liaoning University,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Peking university, 2014.9.13), pp. 46-47 참조.
- 5) 예를 들어 2014년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전략 및 경제 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미중이 평화, 번영, 협력의 길을 선택했으며 양국 간의 경쟁(competition)이 있지만 충돌(conflict)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역시 개회사를 통해 “중미간의 상호 대항(對抗)은 양국과 세계의 재난(災難)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4년 9월 30일 건국 65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발전’ 노선을 통해 국가 주권·안보·발전과 직결된 핵심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공평·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가 강성하고 호전적일 경우 반드시 망국의 길을 걷는다(國强大, 好戰必亡)는 역사적 교훈을 유념해야 한다” 점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2014. 7. 10; *China Daily*, July 10, 2014; 『人民日報』, 2014. 10. 1 참조.

안정, 호혜협력 관계 구축을 대외전략의 중요한 한축으로 삼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소위 ‘삼린정책’(睦隣, 安隣, 富隣)을 주변국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으며 이는 중국이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로 강조해 온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다 호혜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의 삼린정책에서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소위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주변국 외교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⁶⁾ 이는 강대국 중심 외교, 해상 영토 영유권 분류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퇴조하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소위 ‘의리관’(義理觀)을 내세워 주변국, 개도국과의 관계에 있어 의리, 도의를 우선시하고 그들 국가의 요구를 더욱 중시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는 왕이 외교부장의 언급처럼 기존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외교 이론과 실천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국, 주변국, 개도국과의 관계를 자국의 위상 변화에 걸맞게 재조정함으로써 평화·공영에 입각한 공정·합리적인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에 따른 것이며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은 당연히 그 범위 내에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국관계, 주변국관계, 개도국관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지역이다.⁸⁾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시진

6) 이와 관련하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주변 외교 개념은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진일보한 성의와 선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중국은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 형성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人民日報』, 2014. 3. 9. 참조.

7) 2014년 8월 9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10+1)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치협력, 지역협력, 해상협력, 남중국해 영유권 분류 등에서 선린우호(睦鄰友好), 단결호조(團結互助), 공동발전(共同發展)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는 “고락과 운명을 함께 한다”(休戚相關 命運與共)는 주변국 외교의 핵심 기조를 의미한다.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81459.shtml (검색일: 2014. 8. 18)

8) 중미의 신형대국관계와 관련하여 상해국제문제연구원의 장젠(張建)은 ①중미 신형 대국관계의 주요 동력원은 중미의 핵심이익과 공동이익이고, ② 그중에서도 공동이익의 확대는 중미관계 발전의 기초이자 근본이며, ③ 단, 공동이익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모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④ ‘이익이 없는 공동이익’(common interests without interests) 찾아

핑 지도부가 추구하는 기존 외교 이론과 실천의 ‘창조적 발전’(創新)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시범지역의 성격을 갖는다.

Ⅲ.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전략과 대북정책

A. 시진핑의 한반도 인식

2008년 6월 시진핑은 당시 국가 부주석으로서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한반도 인식이 이념적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이후 시 주석의 한반도 인식은 시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동시에 사안별로 전략적 판단과 대응을 달리하는 매우 탄력적이고 복합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한반도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과거형 인식’으로서 중국의 혁명전쟁과 중국공산당 정권 수립, 한국전쟁 과정에서 맺어진 북한과의 이념적, 역사적, 인적 유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감정을 의미한다. 이는 시 주석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지금도 일정부분 그의 한반도 인식에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08년의 한국 전쟁 언급도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현재형 인식’으로서 한국의 경제성장, 정치발전과 대비되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현실과 최고지도부의 부도덕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력 신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북한 지도부의 시대착오적이고 호전적인 정책 실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상호 모순이 없는 공동이익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복합적인 인식의 단면을 보여 준다. 張建, “試論中美新型大國關係,” 『國際關係研究』(2013 第3期), 上海社會科學院 國際關係研究所, pp. 65-67.

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시 주석은 취임 일성으로 인민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혁개방 정책 이후 국가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시 주석의 입장에서 대다수 주민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체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정책의 최상위에 놓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김정은 체제를 부담스러운 ‘문제아’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미래형 인식’으로서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과 연계시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정책의 핵심 기조로 강조해 온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 남북한 공존·공영 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다만 미래형 인식에서도 북한체제의 존속이 중요한 부분으로 상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실용적, 현실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불가피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즉 미래형 인식은 현 단계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향후 변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으로서는 남북한간 국력의 총체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한반도의 현상 타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시 주석의 미래형 인식 속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아직은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점차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⁰⁾

9) 미국 맨스필드재단(Mansfield Foundation)의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대표는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주성’을 전제로 통일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통일의 수단(the means of unification)에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Frank Jannuzi, “East Asia’s Fluid Dynamics,” *Trust, Peace, and Mutual Prosperity Path to Korean Unification*, ‘Korea Global Forum 2014’(2014.9.25.) Proceedings, pp. 53-54.

10) 2013년 6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2014년 7월 서울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시진핑의 이러한 미래형 한반도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한반도 통일문제는 이미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제5항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 한다”고 명시되었지만 그동안 한중간의 통일 논의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베이

B.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과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의 균형

소련 연방의 붕괴와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후 중국은 혈맹인 북한과의 배타적인 관계 유지를 핵심으로 했던 냉전 시기의 한반도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의 한중수교는 중국의 이러한 한반도전략 변화의 산물인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촉진한 핵심 요인이다. 물론 중국은 시대적 조류와 국익 차원에서 한중수교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했지만 여전히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 구상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중국은 열세인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남북한관계의 실질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총체적인 대 한반도 영향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 남북한관계 균형 유지 전략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면서 균형상실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기 한중 전략적 협력이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상태에 머물면서 중국은 대 남북한관계의 균형적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2012년 11월 시진핑의 집권과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이 내실화되고 성숙된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대 남북한 전략적 균형 유지 전략은 또 다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¹¹⁾

징, 서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자주 평화적 통일 지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되었다. 물론 이를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지지’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 주석과 중국의 입장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박-시의 베이징, 서울 정상회담의 통일 논의에 대해서는 문홍호,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中蘇研究』,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문제연구소, 제37권 제3호(2013 가을), pp. 86-88; 이희옥, “한중관계,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6호(2014년 7월 16일), p. 2 참조.

11) 시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징, 서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용, 범위의 확대 발전 추세를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의 베이징 공동성명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進一步充實)를 강조했다 2014년 7월의 서울 공동 성명은 “지난 1년간 전례 없는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중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등 대북정책의 변화가 점증하면서 중국의 대 남북한관계 균형전략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지도부는 여전히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을 최대한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미국 등을 의식한 한반도 영향력의 총체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기존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책 수단을 통해 한중, 북중이라는 두 개의 양자관계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현실적으로 다른 국가가 답습하기 힘든 중국의 고유한 자산이며 시진핑 지도부로서도 적어도 당분간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우려하고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의 대내외 정책노선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대 북한 정책결정 과정의 구조적 특성상 특정 지도자 개인의 인식이 곧바로 정책변화로 연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 이익의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존속과 영향력 확대 유지가 아직은 유용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은 시진핑 지도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구적 차원의 대외전략, 동북아전략, 한반도전략의 변화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또 다른 차원의 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을 균형적으로 유지한다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의도하는 균형 자체가 북중 동맹관계의 엄청난 퇴보라고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대 남북한관계의 균형이라는 한반도전략 기조를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을 것이며 균형이 어려울 경우 오히려

‘성숙한’(成熟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중국이 대 남북한관계의 균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人民日報』, 2013. 6. 28; 『人民日報』, 2014. 7. 4. 참조.

대북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한반도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시진핑으로서는 자국 핵심 이익의 확대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대북정책의 좌표와 수위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IV. 북중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과 한계

A. 선택적 균형의 전략적 유용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수교는 중국의 대 한반도전략 변화의 산물인 동시에 또 다른 변화의 촉진 요인이었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양국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이 계속 격상되어 온 것처럼 여러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쳤고 2014년 7월의 서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명명되었다. 한중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이 양국관계 발전의 실질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상호관계의 지향점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공감대를 내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그 동안의 한중관계 발전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북중관계에 대한 배려와 균형을 의식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점점 어렵고 한중관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국익 관점에서 한중관계의 긍정적 요인과 북중관계의 부정적 요인 간에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유형, 무형의 ‘특혜’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진핑 집권 이후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북중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을 통해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큰 범위의 한반도전략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선택적 균형은 중국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관적 관점에서 사안의 성격, 주변 국제질서 변화 추이, 국제사회의 반응, 중

국의 내부 여론, 북한의 반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동맹관계 혹은 정상관계에 근접하는 정책을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택적 균형의 개념 속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총체적 영향력과 이에 대한 자신감, 북한의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종의 ‘무시’와 ‘회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고유한 지분 의식 등이 내포되어 있다.¹²⁾

중국은 이미 북중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점차 정상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1961년 체결한 중조상호원조조약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특히 동 조약의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¹³⁾ 실제로 그동안 중국의 대북관련 업무와 정책은 주로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中聯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외교부가 대 북한 업무의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데 이 역시 북중관계를 당 대 당(黨對黨)관계, 동맹관계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 12)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분의식은 외형적으로 쉽게 표출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조선’에 대한 보호국, 속국 의식은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한국전쟁 이후 적어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관여할 명분과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물론 이는 대개의 경우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강 건너 불구경처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내면에는 국경지역의 안보 관리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당연한 지분’에 대한 확보 의지가 담겨 있다.
- 13)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중국 칭화대학 옌쉐통(閻學通)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중북 동맹조약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동맹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중북 최고지도자간의 만남 자체가 없었던 반면 중국과 한국의 최고지도자는 여러 차례 회담을 했다. 만약 최고지도자가 3년 넘게 만나지 않은 국가관계를 동맹관계라고 말한다면 빈번하게 만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미 동맹관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인민대국계문제연구소 왕이웨이(王義旻) 소장은 최근 중국이 주변국 외교의 총괄 차원에서 각각의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로 ①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안보 보호 대상이었고, ② 1961년의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중국이 추진하는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옌쉐통과 왕이웨이의 견해가 중국정부는 물론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공식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중 동맹의 성격 변화 혹은 변화 필요성에 대한 중국의 내부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閻學通, “中韓能建立同盟關係嗎?”, 『韓美關係與中韓關係如何共存?』, 성균중국연구소-한중문화협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4.4.24), p. 18; 왕이웨이, “한중 동맹론 - 선린우호조약 체결,”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개원 세미나(2014.9.26) 발표문, pp.2-3 참조.

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당 대 당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외교정책을 사회주의권 해체 이후 전반적으로 정상화하고 대외관계의 형식과 내용을 국제적 관례와 규범에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남아있던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점차 희석시키려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중국이 북중관계에서 이념적, 역사적, 인적 관계에 기초한 동맹의 색채를 줄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북중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 유동적으로 존재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상호관계의 좌표를 선택할 여지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북중, 한중관계와 한반도문제 전반에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운용 여하에 따라 많은 유용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선택적 균형 전략이 갖는 유용성은 첫째,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해 적절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이 북중관계의 동맹 성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한 대응에서 항상 중국의 행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¹⁵⁾

14)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앞선 2014년 7월의 방한을 북중관계를 정상관계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또한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① 한중 공동성명에서 비록 북한 핵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중 고위지도자들의 빈번하고 제도화된 상호방문은 북한 김정은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했고, ② 북한은 악화된 북중관계를 재건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직면했으며, ③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샤오허,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개원 세미나(2014.9.26) 발표문, p. 2 참조.

15) 조영남 역시 북중동맹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외적 기능’(external function)이 약화되고 동맹 상대에 대한 상호 견제, 관리를 의미하는 ‘내적 기능’(internal function)이 강화되는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군사동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1) 북중동맹을 활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2) 북한의 급변 사태 시 중국이 북중동맹을 근거로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영남, “한중관계 20년의 안보 쟁점 분석: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 『국제지역연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1권 4호(2012), pp. 10-11.

둘째, 한반도문제에서 총체적인 영향력 우위를 확대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국가들의 정책 여하에 따라 자국의 대응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북중관계의 강도와 수위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여지를 갖는 것이다.

셋째, 과거 중국이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해결이 어렵거나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한 사안에서 탈피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던 것처럼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중 동맹,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압력·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반발한 것도 동맹관계가 아닌 정상관계의 현실에서 과도한 대북압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⁶⁾ 물론 중국의 대북 압력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는 중국의 능력보다는 의지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이유다.

B. 선택적 균형 전략의 한계

중국이 북중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띤 관계로 변화시키고 두 가지 성격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려는 것은 북중관계 변화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16)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2014년 4월 10일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미중평화와 안보협력’ 세미나에서 중국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요구하고 만일 중국이 못하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미 국무부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동아태 차관보가 동년 4월 1일 워싱턴의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북한 핵을 막지 못하면 중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9756>(검색일: 2014.8.25).

전략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정치, 경제, 안보부문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이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도 제한적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는 대부분의 경우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중관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체제의 존속과 기본적인 우호협력 관계유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이다.¹⁷⁾ 중국이 동맹관계과 정상관계의 범위에서 북중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행전략의 일환이다.

둘째,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총체적인 영향력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고정불변은 아니다. 즉 북한이 과도한 대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경우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처럼 중국, 한국을 의식한 일본의 대북접근이 일정한 성과를 얻을 경우 북한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¹⁸⁾ 또한 북한 핵문제로 인해 장기간 교착상태에 처한 북미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이 역

17) 이와 관련 중국 연변대학 진창이(金强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고집하면 중국도 대안이 없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단기적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취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방안이 없고 대북 유류지원을 위한 단동 지역 송유관을 장기간 폐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서해 및 국경지역의 밀무역 규모가 정상적인 무역액에 버금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제도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金强一,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성균중국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2014.5.2.) 발표 요지 pp. 2-4 참조.

18)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5년 50%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89.1%에 달한다. 북중 무역의 대폭적인 증가는 북일 무역의 급격한 감소와 연계되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특성과 시사점』, *Regional Economic Focus*, Vol. 8, No. 29(2014.6.30), p. 41.

시 중국의 대 북한 독점적 영향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러시아는 비록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대외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지만 2014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의 특사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면담한 것처럼 내심 북러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 복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역시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 축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⁹⁾

셋째, 시진핑 지도부의 북 핵 불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과 대립이 심화,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한 이후 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지지 확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이 중국의 ‘6자 회담’ 재개 주장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중국이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만을 관철하려 한다는 불만에 기인한다.²⁰⁾

넷째,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 불분명한 원칙에 대한 한국의 불만 역시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오가는 대북정책의 유용성을 제약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수교이후 북중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한국, 더 나아가

19) 문홍호, “중러 전략적 협력과 북한,” 『中蘇研究』,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문제연구소, 제35권 제3호(2011 가을), pp. 216-217 참조.

20) 2013년 2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2013년 3월 7일, 2094호)에 찬성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안, 해관, 금융, 변방부대 등 관련 부처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집행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할 만큼 ‘김정일의 위대한 치적’이자 체제 안보의 보루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중심을 잃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2014년 신년사에서도 적대세력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응하여 “강력한 자위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영선은 “북한은 핵 무력을 건설하겠다는 직접적 표현을 피하고 있지만, 핵전쟁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자위의 힘, 즉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 정책포럼』 No. 2013-04(제주평화연구원), p. 4; 하영선, “북한 2014 미로 찾기: 신년사의 해석학,” 『제32호 EAI 논평』(2014년 1월 27일), p. 4 참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유리하다는 중국의 논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심지어 천안함 피침,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에 정면으로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라기보다는 대북정책의 선택지가 극히 제약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한중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와 북중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의 한반도전략에 여전히 불신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함몰되어 한반도정책을 지나치게 자의적, 편의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동맹,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전략을 제약할 것이다.²¹⁾

V. 결 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외교전략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의 대외적 실천 환경 조성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전략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설명처럼 보다 주도적이고(主場), 혁신적이며(創新), 상대국을 보다 이해하고 배려한다(義理)는 점을 핵심 기조로 표방하고 있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외교전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형 대국관계’를 겨냥한 것이며 상대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주로 주변국 및 개도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중시하는 대외전략의 창신, 혁신 과정에서 한반도는 매

21) 예를 들면 시진핑의 집권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간간의 전략적 협력이 내실화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입장 차이는 상존한다. 베이징, 서울의 두 차례 박-시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 핵’ ‘북한의 핵 개발’, ‘북한 비핵화’ 등 북한만을 지목하는 표현을 반대하고 한국의 핵 개발, 미군의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의식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핵 개발’ 등의 표현을 고집했다. 물론 한중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실제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고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중국의 입장을 일정부분 이해한다 해도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지나칠 경우 한국의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 중요한 시험장이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냉전의 잔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강대국 간의 첨예한 대립, 갈등을 촉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변화 여하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핵심이익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다. 북중관계 역시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 추진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한중관계보다 훨씬 더 시진핑 지도부의 외교적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이 대북정책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 일본, 미국, 몽골 등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정책변화를 의식한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정책은 예외적이고, 양국만의 배타적 공간이 존재하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유지에 중점을 주었으나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 하에서 이러한 특혜 위주의 비정상적인 북중관계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시진핑 지도부 역시 북중관계의 급격한 퇴보를 원치 않으며 북한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의 정세가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단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담은 경감시키려는 전략이다. 중국이 북중관계를 동맹과 정상,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시키고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선택적, 탄력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 강조되고 있는 실용적, 현실적 대외 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있어서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자의적으로 넘나드는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은 남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 대 한반도 영향력의 확대 유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압력 회피 등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 북한 영향력 행사의 현실적 한계, 체제의 생존을 위한 북한의 대외적 탈출구 모색,

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일본·미국·러시아 등의 정책변화,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불신 등은 결국 중국의 자기중심적 대북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홍호. “중러 전략적 협력과 북한,” 『中蘇研究』,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문제연구소, 제35권 제3호(2011 가을), pp. 216-217.
- _____.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中蘇研究』,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문제연구소, 제37권 제3호(2013 가을), pp. 86-88.
- 이희욱. “한중관계,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6호(2014.7.16), pp. 2-4.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 정책포럼』 No. 2013-04(제주평화연구원), p. 4.
- 조영남. “한중관계 20년의 안보 쟁점 분석: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 『국제지역연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1권 4호(2012), pp. 10-11.
- 하영선. “북한 2014 미로 찾기: 신년사의 해석학,” 『제32호 EAI 논평』(2014.1.27), p. 4.
- Cooper, Helene. “Hagel Spars with Chinese over Islands and Security,” *The New York Times*, April 8, 2014.
- Jannuzi, Frank. “East Asia’s Fluid Dynamics,” *Trust, Peace, and Mutual Prosperity Path to Korean Unification*, ‘Korea Global Forum 2014’(2014.9.25.) Proceedings, pp. 53-54.
- Zhao, Suisheng. “Building the New model of US-China Relationship in East Asia,” *East Asia in reconstruction-Towards Mature Partnership*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n Studies’ sponsored by Liaoning University,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Peking

university, 2014.9.13), pp. 46-47.

閻學通. “中韓能建立同盟關係嗎?”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떻게 공존하는가(韓美關係與中韓關係如何共存?)』, 성균중국연구소-한중문화협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4.4.24), p. 18.

金強一.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북한의 변화,” 성균중국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2014.5.2) 발표 요지 pp. 2-4.

吳建民. “中國外交需要大戰略,” 『國際關係研究』(2013年 第1期), 上海社會科學院 國際關係研究所, p. 12.

張建. “試論中美新型大國關係,” 『國際關係研究』(2013 第3期), 上海社會科學院 國際關係研究所, pp. 65-67.

王義桅. “한중 동맹론 - 선린우호조약 체결,”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개원 세미나(2014.9.26) 발표문, pp. 2-3.

成曉河.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개원 세미나 (2014.9.26) 발표문, p.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Regional Economic Focus*, Vol. 8, No. 29(2014.6.30), p. 41.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81459.shtml (검색일: 2014.8.18).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9756> (검색일: 2014.8.25).

『人民日報』, 2014. 7. 10.

『人民日報』, 2014. 10. 1.

China Daily, July 10, 2014.

[논문투고일: 2014. 10. 10]

[심사의뢰일: 2014. 10. 15]

[게재확정일: 2014. 11. 03]